

“中, AI교과서 33종… 300개 학교서 30만명 시범교육”

AI·SW교육 글로벌 컨퍼런스

中 AI 인재육성·교육에 사활
유치원부터 도입해 장벽 낮춰
韓, AI 인재 OECD 끌찌 수준

중국은 33권의 인공지능(AI) 실험 교과서를 개발·보유하고 있으며,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직업 교육 과정까지 AI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AI 시대를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고 한국정보과학교육연합회가 중심이 돼 ‘차세대 SW 교육 표준 모델’을 개발 중이며, SW 교육에 ‘인공지능과 융합’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추가됐다.

중국 AI 교과서 집필을 주도한 친 주진 북경교육네트워크정보센터 주임은 7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의 ‘2019 소프트웨어(SW) 교육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2019 AI·SW 교육의 시작, AI 시대를 대비하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는 AI·SW 교과서 집필, AI 교육 실험 플랫폼 개발, AI 실험 학교 및 사례 제작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300개 시범학교에서 각 1000명씩 30만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AI 시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과서 집필은 AI 전문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각급 학교 교사들이 주도해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친 주진 주임은 “중국은 현재 유치원 6권, 초등학교 12권,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각각 6권의 AI 실험 교과서를 보유하고 있다”며 “초·중등학교의 AI·SW 교육은 필수와 선택 과목으로 분리되며, 필수 과목은 2개 수업으로 약 1.5시간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중국의 유치원 AI 교육은 교사가 AI 로봇에게 ‘신나는 노래를 들려줘’라고 하면 로봇이 노래를 불러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2~3명을 모둠으로 묶어 AI 로봇과 소통하게 한다. 초

등학교는 ▲1학년은 AI 발견 ▲2학년은 AI 인증 ▲3학년은 AI 활용 ▲4학년은 이미지화를 통한 창의적 AI ▲5학년은 AI 제작 ▲6학년은 AI의 확장에 집중한다.

또 중학교에서는 그래픽 인터페이스 내에서 클릭과 드래그 등 동작으로 AI 모델을 설계할 수 있게 하며, 고등학교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오픈 소스 마더보드 활용, 변형 로봇 만들기 활동, AI 기반 스마트폰 앱 활용뿐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훌로그램 기술 등으로 AI 기술을 확장시킨다. 직업 교육은 졸업생이 직업 교육 교사와 만든 파이썬, 지능 로봇, 피처 엔지니어링 등으로 AI 애플리케이션 기술이 확대된다.

중국은 또 AI 전문 교사 배출에도 힘을 쏟아 현재 100~300명의 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AI 클라우드 플랫폼 도 보유해 AI 입문부터 고급 단계까지 스크래치, 파이썬, 아두이노, H5

등을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김수환 총신대 교수는 ‘한국의 초·중등 SW 교육’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는 2015년 초·중·고 SW 교육을 필수화한다고 밝히고, 올해부터 초등학교 17시간, 중학교 34시간을 의무화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과정으로 도입했다”며 “다만, 초등학교에서는 SW 교육이 독립교과로 지정돼 있지 않으며, 초·중·고가 연계된 교육 과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SW 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없으며, 교수 역량이 강화·발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IBM 손레지나 커뮤니케이션 상무는 “최근 캐나다 한 기업의 조사에 따르면 15개국을 대상으로 AI 전문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168명의 AI 인재를 보유해 끌찌에서 2번째로 랭크됐다”며 “소프트웨어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아직은 한국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여하는 게 1% 정도로 미미하다”고 밝혔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신재경 SW 교육 담당 이사는 “그동안 기업에서 일을 잘 해왔던 사람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새롭게 공부해야 해 기업에서 재교육이 시급하다”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기술 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MS는 기술을 공유하는 데도 힘을 쓸고 있지만, 윤리·철학 등이 동원되지 않고 기술만 있으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윤리와 철학, 문화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우아한형제들 ‘배달의 민족’

“라이더는 1층까지
실내는 로봇이 배달”

배달 로봇 ‘딜리타워’ 시범 서비스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자율주행 실내 배달 로봇 ‘딜리타워’를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7일 밝혔다.

구성원들이 배민라이더스를 통해 사무실로 음식을 배달시키면, 라이더는 건물에 도착해 1층에 대기하고 있는 딜리타워에 음식을 넣고, 주문 고객이 있는 층까지는 로봇이 배달을 수행한다.

우아한형제들은 고객에게 배달하는 마지막 단계인 ‘라스트마일’을 개선하고자 실내 배달 로봇을 연구, 로봇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라이더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라이더들의 배달 시간을 줄여 라이더가 더 많은 배달을 수행할 수 있다. 사무실은 보안 때문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거나 절차가 복잡해, 라이더들이 건물 1층에서 주문자에게 음식을 전달한다. 이 때 주문자가 고층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경우 라이더들이 5~10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비대면 배달로 인해 사무 및 생활 공간의 보안이 강화된다는 이점이 있다.

로봇과 엘리베이터를 연동시키는 관제 시스템을 통해 로봇이 스스로 층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시범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다. 이를 위해 우아한형제들은 한 엘리베이터 제조사와 협력해 딜리타워가 엘리베이터를 원격으로 호출하고 태그 내릴 수 있는 고유의 기술을 연구, 개발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택시 동승플랫폼 ‘반반택시’ 두 달 만에 운송건 400% ↑



코나투스는 지난 8월 출시한 반반택시 서비스가 9월 말까지 운송 건수가 400%

넘게 성장했다고 7일 밝혔다. 서비스 시작 2개월 만의 성과다. 동승콜의 운송 성공률도 60% 수준으로 증가했다.

반반택시는 같은 방향 승객들의 자발적 동승을 중개하는 택시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승객이 ‘동승콜’ 옵션을 선택해 호출하면 같은 방향의 승객과 운임을 나눠낼 수 있다. 동승 과정에 택시기사가 개입할 수 없단 점에서 기존 기사 주도 합승과 차이가 있다.

동승콜은 심야 승차난이 심각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서울 12개 구(강남·서초·종로·중구·마포·용산·영등포·구로·성동·광진·동작·관악)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코나투스에 따르면 통상적인 심야시간 호출 운송 성공률은 30% 이하 수준인데, 반반택시는 동승콜로 60%의 운송 성공률을 달성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야놀자 ‘풀빌라 숙박권’ 쏜다

야놀자가 ‘풀빌라 무료 숙박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야놀자는 오는 15일까지 전국 8개 인기 풀빌라 펜션 중 숙박하고 싶은 곳과 가고 싶은 이유를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달면 추첨을 통해 해당 풀빌라의 무료 숙박권과 야놀자 포인트 3만원, 3등(100명) 야놀자 포인트 5000원이다. 당첨자는 이달 23일 야놀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야놀자 포인트는 야놀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숙박 또는 레저/티켓 예약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한편, 야놀자는 지난 6월 우리펜션을 인수해 현재 국내 최다 펜션 인벤토리를 확보, 고객들에게 총 1만개 이상의 펜션, 풀빌라 등에 대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펜션/풀빌라’ 큐레이션 페이지에서는 매주 특가 이벤트 및 할인쿠폰 프로모션까지 진행,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강석환 야놀자 국내마케팅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폼 운송 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했다.

스타트업 업계도 타다의 발표에 당혹스럽단 입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측은 최근 국토부와 시행령 내용 협의를 하고 있는데, 타다의 발표가 국토부와의 합의안 마련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정책팀장은 “초기스타트업은 법제화가 돼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안이 빨리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법제화가 빨리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